



新高유가 극복은 에너지절약시스템의 정착을 통해



지난 5월 19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국가에너지자문회의 석상에서 정세균 산자부 장관은 '에너지 정책성과 및 향후 전략'을 발표했다. 이 보고의 요점은 현재의 고유가 현상이 일시적이지 않다는데 주목하고 새로운 대책보다는 해외자원개발, 에너지절약 등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조 아래서 나온 것이 바로 '新高유가 극복을 위한 5대 실천전략'이다.

5대 실천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는 9월 민관합동의 국가에너지위원회를 가동, 에너지정책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증대시키고, 2013년까지 자주개발률 목표 18%를 차질없이 달성하겠다. 또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를 2011년까지 총에너지사용량의 5%까지 보급하며, 에너지저소비형 사회구축을 위해 고효율제품 보급확대, 경차보급, 대기전력의무화 등을 추진하겠다. LNG도입 확대, 바이오디젤 사용의무화, 바이오에탄올 사용검토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공급을 확대하겠다. 등등.

특히,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품목을 확대하여 보급을 확산시키겠다는 것과 VA(자발적 협약)에 이어 NA(정부협약)도입을 통해 에너지다소비업체의 에너지감축을 유도하겠다는 부분에 주목하고 싶다. 그동안 두 제도의 시행으로 많은 부문에서 에너지절약시설투자가 이루어져 왔다는 점은 부인하지 못

할 명백한 사실이다. 하지만 시행초기와 다르게 두 가지 제도 모두 초기의 메리트가 급속히 상실돼 최근에는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됐다는 지적도 있다. 민간기업의 자발적 협약이 이벤트화하고 있다는 말도 들리는 실정이고 보면, 정부협약 역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유인요소를 제공해야 본래의 의도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 기업, 국민 모두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자발적인 에너지절약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는 지적은 백 번이고 천 번이고 옳은 말이다. 하지만 먼저 범사회적으로 에너지절약시스템이 정착되지 않는다면 '공염불'이 될 공산이 크다. 신재생에너지설비의 경제성이 단시간 내에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기존 화석연료의 사용량을 줄이면서 에너지효율성을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기업과 사회, 국가의 에너지절약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도 지속가능하면서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에너지강국 건설! 고유가 시대만의 화두로 그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사)에너지절약전문기업협회
회장 유제인